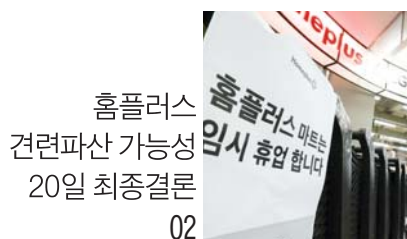


코스피	코스닥
6856.83 (+49.90)	783.98 (-15.38)
금리 (국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887 (+0.078)	1493.90 (-9.50)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시

전문가·시민, 규제완화 한 목소리 “비아파트 총수·연면적 제한 풀어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

김윤덕 국토부 장관 등 60명 참석
정비사업 대출 기준적용 도마 위
일각선 규제완화 반대 목소리도

주택 공급 확대를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규제 완화의 성토장이 됐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총수와 연면적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지역의 정비사업 대출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오늘은 국토부가, 내일은 금융위원회가, 모래는 기획재정부가 각각 주택공급과 금융·세제 분야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한다”며 “곧 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오늘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학계와 주택건설·금융업계, 공공기관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전문가와 시민 모두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주택공급은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입주까지 파이프라인 흐름으로 봐야하는데 지금은 과정마다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데는 금융·세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공급 위축은 건축 규제와 대출, 세금, 전세사기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비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파트와 같이 규제지역에 묶여 대출계약도 크고, 현실적으로 기금이나 보증 상품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명희 신길2지구 위원장은 “현장에서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

자체가 없다”며 “투기자금이 아닌 생계형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주택 가운데 노후 주택 비중이 절반에 달해 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 대상 단지 가운데 시공은 7%에 그친다”며 “정비사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공기여 방식의 유연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가 빠른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보니 규제 완화 목소리만 가득하지만 재건축·재개발을 빠르게 하는 방안만이 우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인 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李 대통령 “물가·부동산 안정 총력… 잠재성장률 3% 이뤄야”

국무회의 주재… 부동산 여론 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두번째 (목표)가 부수적인 투기 유발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잠재성장률을 3%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회의 중에 유튜브 중계 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

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국민 삶에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어난 결과”라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진단했다.

〈2면에 계속〉

/서재진 기자 syj@



metro

‘3高 위기 극복’ 정책역량 집중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전기료 등 중앙 공공요금 동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농축수산물 할인권 매달 발행
중소기업·서민금융 지원 확대

정부가 올해 하반기 농축수산물 할인권을 다달이 발행한다. 오는 9월 추석 대책과는 별도로, 매월 20% 내외의 이른바 ‘상시 할인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기·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환율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는 14조 원대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한다.

〈관련기사 3면〉

재정경제부는 14일 유관부처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舊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정책 운용 시 이 같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험 대응’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석유류 및 장비구니물가의 안정, 생계비부담 완화 등 고물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례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농축수산물권(할인 20%)을 매달 발행할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대개 명절을 앞둔 시점에만 발행해 왔다. 설과 추석 때 각각 100억 원, 150억 원대로 편성하던 지원 규모도 월 200억 원대로 확대한다. 단, 중동발 충격을 받은 특수 상황하에서의 한시적 조치다.

특히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을 지원한다. 종전까지는 쌀·계란·돼지고기·고등어 등 22개 품목이었다. 1인당 할인 한도도 주(週)당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도매시장 출하 및 수입의 확대를 추진해 공급·유통 전반에 걸쳐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수입과일과 식품원료 등 먹거리 49개 품목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최대 30%포인트(p)가량 낮춰 국내 공급을 확대한다.

달걀의 경우, 수입 물량을 기존 대비 6배 이상 확대해 신선란 2억 개를 7~8월

중 들어올 계획이다. 이를 중소형 유통업체 및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에도 공급한다.

아울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한다. 불법 행위로 거둬들인 이익에는 2배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반복담합 사업자 제재방안으로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임원해임명령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재경부는 이러한 징벌적 조치가 ‘불가인정 대책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엔 가스 및 전기료 등 중앙 공공요금이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공공요금도 동결 기조 내지 인상 최소화가 확산하도록 각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놓여진 면세유 보조금 지급, 알뜰폰 활성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원·달러 환율 대응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14조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규모를 현행 대비 1조 원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총 3000억 원) 상품을 신설한다.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법인세·부가세·소득세·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을 늘리고 보험료 할인도 확대한다.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변동금리대출의 장기·고정금리대출 전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저신용자들의 신용 개선을 위해 소액 저리 장기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2027년도 햇살론의 공급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내년 최저임금, 1만 530원 이상 전망

2% 인상 근접… 노사 입장차 여전

내년(2027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이 적어도 올해 보다 2.0% 오른 1만 530원 이상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까지 노사 양측은 총 9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출 끝에 간극을 690원까지

좁혔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 1220원(올해 대비 8.7%, 900원 인상)을, 경영계는 1만 530원(2.0%, 210원)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경영계는 2.0%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고수하며 노사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최임위는 이날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 李 대통령 “낙태약 허용해야…해외직구, 사고 방치 무책임”
- ▲ 송영길, 탈당 이력 공격당하자 정청래에 역공 “철저히 선청후당”



- ▲ 목포·순천 의대 중재안 사실상 결렬…기획위 “추가 절충안 없다”
- ▲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이 대통령과 정청래는 정치적 동지”

/사진 뉴스시

- ▲ 국방부, 고작 1건이라 했지만 군 장병 거소투표 사고 39건
- ▲ 오세훈 “부동산 한 말씀만”…李 대통령 “그 얘기는 나중에”